

신년사



정 상 훈

- 月刊『考試界』발행인
- 도서출판『고시계사/미디어 북』대표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 세계본부 글로벌 지원 의장
- 전) 한국잡지협회 교육원 원장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임인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 그동안 月刊『考試界』를 변함없이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도 나온다 해서 한숨 돌린다 싶더니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22년에는 月刊『考試界』를 사랑하시는 애독자 여러분들은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일상을 되찾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문재인정권은 남미 모델을 벤치마킹 했을 것처럼 생각되는 집권 4년 반 내내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왔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청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국민살림살이를 곤궁하게 해놓고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지갑도 채워주겠다고 하였다. 서민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집값을 올려놓고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살라고 하였다. 또한 경제체질 개선과 재도약에 필요한 개혁과제는 손도 대지 않는 채 ‘회피’로 일관했다. 처음에 약속하였던 대선공약이

라도 지지층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어김 없이 ‘미루기-떠넘기기-남 탓’ 3종 세트를 동원해 꼬리를 내렸다. 이러한 것들은 온 국민을 편가르는 갈라치기 기술이며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수법이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는데, 4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2월에는 4309만원으로 109% 올랐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임기 초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20년이면 30평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현재는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차기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업에 활력을 주는 친기업 정책과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제 정책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한 법치주의란 단순히 ‘다수당의 국회결의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통치방식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법의 정신’에 따르는 통치방식을 의미한다. 이른바 ‘선출된 권력’이 입법과 행정에 더하여 사법적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오직 다수의 결정이 무제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비민주적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며칠 전 그동안 침묵하던 법관회의가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에 관하여 비판하면서 대법원장의 인사작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김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연구회 소속 법관을 중심으로 인사를 해 왔다. 이는,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부장판사를 3년 근무 원칙도 무시한 채 같은 자리에 6년간 유임시킨 데서 알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며 전체 법관의 대표다. 법관인사는 대법원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땅에 국민을 위한 사법이 사라지고 사법을 위한 사법만 존재한다면 사법의 독립은 사라지고 사법의 전횡만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검찰과 경찰 외에 수시로 특검법을 만들 수 있고, 필요하면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외국의 입법례도 찾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다고 할 때부터 무용론은 비등했다. 그렇지만, 정권의 고집으로 탄생한 기구다. 탄생 시점부터 공직자의 비위를 잡기 보다는 정권의 적들을 차단하는 기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현재 공수처의 행태를 보면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수처가 한 일이라고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정권을 결사옹위 한 것뿐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공수처는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외국에서는 국가조직 하나를 만들기 위해 법 위원회를 만들어 몇

년씩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결과물을 내놓고 입법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정치권에서 타협하듯이 선거법에 끼워넣어 만들었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것도 정권에 이용되는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하여 뜨거운 공방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독점적인 법조인양성제도인 로스쿨제도와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일부라도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로스쿨제도는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학법 개정안 맞교환으로 정기회기 폐회 3분 전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속으로 기형적으로 탄생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 현재 절대 다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 로스쿨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른바 5탈자 ‘변시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여당인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2030 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일 것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일조하겠다는 창간 당시의 굳은 결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5급 공채(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시 등과 관련된 수험소식과 자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법률에 관련된 소식에 목말라하는 애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임인년 새해에는 큰 꿈을 향해 뛰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며, 댁내 가정가정에도 건강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린다.